

AI와 공존하며 사람 중심 저널리즘으로 경쟁력 확보

글로벌 미디어 전문가가 예측한 2026 저널리즘 전망

하버드대 저널리즘 연구기관인 니먼랩은 지난해 12월 미디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올해 저널리즘 전망에 대한 의견을 수집해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규모가 아니라 충성도가 핵심

사라 에브너

파이낸셜 타임스 총괄 편집위원

2026년 언론사의 핵심 과제는 이미 확보한 독자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새로운 독자를 늘리는 것 보다 기존 독자를 유지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뉴스레터, 커뮤니티 행사와 Q&A, 팟캐스트와 영상, 설명 기사, 분석, 뛰어난 시각 저널리즘은 모두 직접적이고 충성도 높은 관계를 구축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활동은 ‘왜 우리가 필요한지’, ‘왜 우리가 다른지’를 보여주는 수단이

된다. 독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관련성·신뢰성·유용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핵심은 규모가 아니라 충성도다. AI는 개인화를 중심으로 이러한 전환을 가속화하지만, 신뢰는 기술이 만들어주지 않는다. 개인화가 중요해질수록, 사람 냄새 나는 저널리즘, 즉 인간의 목소리가 더욱 필요하다.

AI 콘텐츠 과잉 속 인간이 작성한 저널리즘 가치 지속

데이브이 알바

블룸버그 뉴스 기술 전문기자

2026년에는 AI가 작성한 콘텐츠의 양이 인간이 만든 콘텐츠를 앞지를 것이다. 문제는 무한한 콘텐츠 속에서 ‘무엇이 저널리즘이다’이다. AI가 만들어낸 미디어의 과잉 속에서 독자의 관심은 더욱 분산될 것이

된다. 온라인에서 인간이 쓴 글은 점점 희귀해지겠지만, 희소성만으로는 뉴스가 살아남을 수 없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찾아볼 가치가 있다고 믿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저널리즘의 가치는 결코 생산량에 있지 않았다. 취재는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저널리즘은 기사 하나하나를 통해,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을 보여줄 때 변형할 수 있다.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용기, 판단력, 그리고 모든 문장에 책임을 지려는 태도는 어떤 알고리즘도 재현할 수 없다.

뉴스룸-상품개발팀 두 중심축으로 조직 재편

미라이언트 크래딧

애틀란틱 수익화·성장 제품 전략 책임자

미래에 생존할 언론사는 콘텐츠를 만드는 뉴스룸과, 콘텐츠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프로덕트 팀 두 조직을 중심으로 통합하게 될 것이다. 목표는 독자와 깊이 연결되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뉴스룸과 프로덕트 팀이 분리된 채로는, 사람들이 기꺼이 구독하고 후원할 만큼 직관적이고 매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특히 기존 인쇄 시대의 취재·편집 구조는 과감히 재편될 것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다.

AI기업은 결국 뉴스에 보상하게 될 것

니콜라스 톰슨

애틀란틱 CEO

현재 AI 검색은 대부분 정보를 추출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같이 이용자를 언론사에게 연결하는 구식 모델은 아직 AI에 존재하지 않는 다. 실제로 AI 검색으로 독자를 얻

는 언론사는 매우 드물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AI 기업들은 검색창에서 제공되는 외부 링크를 더 눈에 띄게 노출할 수도 있고, 초기 정보를 제공한 사이트로 이용자를 다시 안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또한 답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언론사나 콘텐츠 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도 있다. AI 검색 서비스 내 광고 수익을 공유할 수도 있다. 현재 AI 기업들이 이런 방식을 채택하지 않는 이유는 그럴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강한 언론은 AI 산업에 긍정적이다. AI 모델이 더 나은 정보, 더 정확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6년에는 그 전환을 시도하는 첫 번째 대형 AI 기업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3면에 계속

신문 저널리즘이 도약하는 병오년 되길

한눈에 보는 2026년 신문업계 2026년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신문협회보는 협회와 54개 회원사의 주요 일정을 정리했다.

2026년 신문협회 및 회원사 주요 행사

● 회원사 ● 협회

- 1** 15~16 신년 발행인 세미나
- 20** 중부매일신문 창간 36주년
- 2** 1 세계일보 창간 37주년
- 26** 협회 이사회
- 3** 1 경남신문 창간 80주년
- 2** 2 대한경제 창간 62주년
- 5** 5 조선일보 창간 106주년
- 21** 21 스포츠조선 창간 36주년
- 24** 24 매일경제 창간 60주년
- 26** 협회 정기총회
- 30** 30 경북도민일보 창간 22주년



- 4** 1 동아일보 창간 106주년
- 7** 7 제70회 신문의 날 기념행사
뉴스1 창립 15주년
- 20** 20 광주일보 창간 74주년
- 5** 15 경상일보 창간 37주년
한겨레신문 창간 38주년
- 6** 1 전북일보 창간 76주년
- 1~3** 1~3 세계신문협회 총회
<프랑스 마르세유>
- 8** 8 전라일보 창간 32주년
- 9** 9 한국일보 창간 72주년
- 11** 11 충청투데이 창간 36주년
- 11~12** 11~12 협회 창립 69주년 기념
발행인 세미나
- 15** 15 아시아경제 창간 38주년
- 19** 19 머니투데이 창간 25주년
- 22** 22 스포츠서울 창간 41주년
- 23** 23 경북매일신문 창간 36주년

- 7** 7 매일신문 창간 80주년
중부일보 창간 35주년
- 15** 15 인천일보 창간 38주년
- 18** 18 서울신문 창간 122주년
- 19** 19 울산매일 창간 35주년
- 26** 26 대구일보 창간 81주년

- 8** 1 서울경제 창간 66주년
- 8** 8 경기일보 창간 38주년
- 15** 15 헤럴드경제 창간 73주년
- 28** 28 경북일보 창간 36주년

- 9** 1 국제신문 창간 79주년
중도일보 창간 75주년
- 10** 10 부산일보 창간 80주년
- 10~11** 10~11 지역신문 경영혁신
전략 세미나

- 15** 15 브릿지경제 창간 12주년
- 22** 22 전자신문 창간 44주년
중앙일보 창간 61주년

- 10** 1 제주일보 창간 81주년
- 4** 4 이데일리 창간 26주년
- 6** 6 경향신문 창간 80주년
- 7** 7 경인일보 창간 81주년
- 9** 9 내일신문 창간 33주년
- 11** 11 영남일보 창간 81주년
- 12** 12 한국경제 창간 62주년
- 15** 15 경남일보 창간 117주년
- 22~23** 22~23 하반기 발행인 세미나
- 24** 24 강원일보 창간 81주년

- II** 1 문화일보 창간 35주년
코리아타임스 창간 76주년
- 11** 11 대전일보 창간 76주년
- 15** 15 아주경제 창간 19주년
- 22** 22 전북도민일보 창간 38주년
- 26** 26 강원도민일보 창간 34주년

- 3** 3 신문발행인포럼
- 10** 10 국민일보 창간 38주년
- 19** 19 연합뉴스 창립 46주년

허위조작정보 규제, 분노보다 헌법이 먼저다

기고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허위 폭로로, 한 연예인의 삶을 돌이킬 수 없이 무너뜨렸던 강용석 변호사가 “한 번 손 꼭 붙들고 정말 죄송하다고 밀하고 싶다”고 했다. 몇 년이 흐른 뒤, 이미 명예와 일상이 파괴된 후에 나온 반성은 공허하게 들린다. 허위조작정보로 돈벌이를 하는 자들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분노가 뒤따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는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노가 정당하다고 해서 입법이 그 분노의 방향을 그대로 따라 가도 되는 것은 아니다. 허위정보의 폐해가 크다는 사실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이 헌법적으로 정당해야 한다는 요구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가장 분노가 큰 순간에 가장 신중한 입법이 요구된다.

여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내세워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은 졸속에 가깝다. 대통령 실과 여당의 메시지는 엇갈리고, 별의자가 법안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정황도 드러났다. 소관 상임위가 삭제한 단순 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이 법사위에서 되살아나고, 본회의 상정 일정이 마지막에 바뀌는 등 입법 과정 전반에서 일관성과 숙의의 흔적을 찾기 어렵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여당의 주도로 2025년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는 개인의 주관적 기본권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객관적 제도로서 두터운 보호를 받아왔다. 언론은 권력 감시와 여론 형성

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물론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주체가 다양해진 것은 사실이다. 이제 핵심은 ‘누가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 관해, 무엇을 말하느냐’에 있다. 공인과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은 여전히, 그리고 더욱 폭넓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가장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해 온 주체는 여전히 언론사다.

언론자유 무시한 처벌 편의주의적 입법

그럼에도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처벌 편의주의에 기초해 규제 범위와 제재 수위를 과도하게 확장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호해 온 헌법적 원리에 역행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원래 온라인 영역을 규율하는 특별법이고, 언론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이라는 별도의 특별법이 존재한다. 그런데도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규제 대상으로 포섭하고, 일정 기준(정보제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우고 있다. 이는 온라인에 게재되는 언론 기사 대부분을 정보통신망법의 규율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이며, 결과적으로 언론사는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도 중첩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법체계의 혼란과 이중 규제 문제를 피하기 어렵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선제적으로 규정하고 금지·처벌하는 구조다. 민주주의 공론장은 의혹 제기와 잠정적 추정, 비판과 반론이 충돌하며 형성된다. 진실 또는 허위는 고정된 결론이 아니다. 시간에 따라 새

로운 사실이 더해지고 검증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정부가 진실의 기준을 확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순간, 공론장은 필연적으로 위축된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미네르바 사건에서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을 처벌한 구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이번 개정 정보통신망법 역시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충족하기 어렵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역시 큰 문제다. 이미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법정손해배상 또는 전 보적손해배상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도록 하는 배액 배상은 언론에게 소송 리스크를 급격히 키운다. 권리자나 대기업이 비판 보도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전략적봉쇄소송(SLAPP)을 낭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언론사가 최종적으로 승소하더라도, 소송을 겪는 과정 자체가 실질적인 처벌로 작동한다. 면책 규정이나 봉쇄소송 방지 규정이 포함돼 있다고 하나, 정보통신망

법 전체 구조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공인과 공적사안에 대한 비판보도 위축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 개념을 도입하며, “본래 의미와 달리 오인토록 변형된 정보” 등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 기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취재 당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보도조차 사후적으로 허위조작보도로 평가될 위험을 안게 된다. 사설·논평에 대한 반론권 인정, 정정보도·반론 보도 청구기간의 대폭 연장, 계재 위치와 방식의 강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부과된 정정보도 기사별 알림 표시 의무, 반복적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과징금 부과 등은 모두 언론의 편집권과 취재 독립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항들이다. 공인과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다른 길을택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불법 콘텐츠를 규율하되 저널리즘 콘텐츠는 보호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 미국은 공직자와 공적 인물에게 ‘현실적 악의’를 입증토록 하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전략적봉쇄소송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운용해 왔다. 무엇보다 허위정보 대응의 초점은 언론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플랫폼 책임 강화와 시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제고에 맞춰져 있다.

허위정보는 분명 문제다. 피해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취지 자체를 부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규제와 징벌이 기본값이 되는 순간 언론은 방어적 보도로 기울고, 논쟁적 사안일수록 ‘법무 검토를 통과한 최소한의 문장’만 남게 된다. 그 결과 시민이 접하는 정보는 더 적어지고, 더 무난해진다. 민주주의 가치 러야 할 비용이 커지는 것이다. 이미 우리 법체계에는 형사처벌, 민사상 손해배상, 정정·반론보도라는 다층적 구제 수단이 존재한다. 표현의 자유는 불편하고 위험해보이기 때문에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다. 허위정보 대응은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한 거버넌스, 그리고 시민의 분별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론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정교한 장치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 결과 재석 177인 중 찬성 170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개정안은 고의로 불법 정보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

할 경우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브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이다. 증명이 어려운 손해도 5천만원까지 배상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원 판결에서 허위·조작 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두 번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까

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 법사위 심사에서 일부 수정됐지만,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 논란이 일면서 막판까지 수정 작업을 거쳤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30일 국무 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 5일 시행된다.

제70회 신문의 날 기념 표어·캐릭터 공모전 실시

2월 27일 마감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제70회 신문의 날(4월 7일)을 맞아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은 독자들에게 신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신문의 날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

된 행사를, 지난해에 이어 ‘표어’와 ‘신문홍보 캐릭터’ 두 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표어 부문은 20자 이내로 개인당 2점 까지 출품이 가능하며, 신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캐릭터 부문은 손그림을 제외한

이미지 파일 형식(jpg·png·pdf)으로 개인별 최대 2개 작품까지 출품할 수 있다.

접수는 2월 27일까지이며, 부문별 대상 수상자는 상금 100만 원과 상패를, 우수상 수상자 2명은 상금 50만 원과 상패를 각각 받는다.

2026년 ‘신문협회상’ 후보자 추천 접수

신문협회는 2026년 ‘신문협회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신문협회상은 매년 각 회원사에서 추천한 우수 사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수상자는 상패와 상금 100만 원을 받는다.

회원사는 후보자 추천서와 공적 증빙서류 등을 오는 2월 27일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은 오는 4월 7일 신문의 날 기념대회에서 열린다.

올해 언론진흥기금 사업비 178억 원…전년比 14.79% 감소

지발기금은 42% 늘어 117억 5,100만 원 책정

2026년 언론진흥기금 사업비(표1)가 전년 대비 14.79% 하락한 178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25년 209억 2,200만 원 대비 30억 9,500만 원 감소한 규모이다.

언론진흥기금의 주요 사업별 예산은 △뉴스정보유통활성화 40억 8,800만 원(7,100만 원↓) △뉴스미디어저널리즘신뢰성제고 57억 6,300만 원(14억 4,900만 원↓) △뉴스미디어디지털혁신지원 79억 7,600만 원(15억 7,500만 원↓) 등으로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특히 뉴스콘텐츠인프라구축 예산은 38억 1,900만 원(14억 9,8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28.17% 급감했다. 이에 따른 언론사의 디지털 경쟁력과 취재·보도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26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표2)는 전년도 대비 42% 증액된 117억 5,1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세부 사업별로는 △기획취재지원 10억 원(5억 원↑) △지역신문제안사업 20억 원(17억 원↑) △디지털취재장비임대지원 30억 5천만 원(14억 원↑) 등이다.

<표1> 2026년 언론진흥기금 사업비(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5년(A)	2026년(B)	증감(B-A)(%)
사업비 총계	20,922	17,827	△3,095(△14.79)
□뉴스정보유통활성화 (정보접근권확산지원)	4,159	4,088	△71(△1.71)
○공배센터운영지원	178	174	△4(△2.25)
○신문공동수송노선운영	1,533	1,533	-
○신문우송비지원	400	400	-
○소외계층구독료지원	1,748	1,711	△37(△2.12)
○국제언론교류지원	300	270	△30(△10)
□뉴스미디어저널리즘신뢰성제고	7,212	5,763	△1,449(△20.09)
○미디어교육지원	3,350	2,863	△487(△14.54)
○신문윤리심의지원	2,900	2,900	-
○저널리즘교육통합지원	962	-	△962(△100)
□뉴스미디어디지털혁신지원	9,551	7,976	△1,575(△16.49)
○뉴스콘텐츠생산지원	4,234	4,157	△77(△1.82)
○뉴스콘텐츠인프라구축	5,317	3,819	△1,498(△28.17)

<표2> 2026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비(단위: 백만 원)

사업명	2025년(A)	2026년(B)	증감(B-A)(%)
사업비 총계	8,251	11,751	3,500(42.42)
□지역신문역량지원	4,249	7,749	3,500(82.37)
○기획취재지원	500	1,000	500(100)
○지역신문제안사업	300	2,000	1,700(566.67)
○지역민참여보도	128	128	-
○지역인재인턴프로그램지원	620	610	△10(△1.61)
○지역신문교류지원	150	150	-
○지역신문모니터링	275	275	-
○디지털취재장비임대지원	1,650	3,050	1,400(84.85)
○지방위기리집운영	126	126	-
○공동주제심층보도지원	200	200	-
○지역공동체활성화프로젝트	300	210	△90(△30)
□지역공헌활동지원	4,002	4,002	-
○소외계층구독료지원	2,547	2,547	-
○지역신문활용교육지원	1,455	1,455	-

▶ 1면에서 계속

‘무엇’ 보다 ‘어떻게’ 전달이 중요

타네스 에반스

월스트리트저널 디지털 책임자

지난 10여 년 동안 언론계는 개인화를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게 콘텐츠를 분류·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여겼다. 그러나 2026년에는 달라진다.

첫 번째 단계는 비교적 쉬운 ‘형식의 개인화’다. 출퇴근 독자에게 이동 시간에 맞춰 오디오 요약을 제공하고, 업무 대부분을 이메일로 보내는 독자에게는 뉴스 레터를 제공하는 식이다. 흥미로운 건 두 번째 단계다. 바로 스토리텔링 자체의 개인화다. 하나의 취재 결과가 독자의 맥락과 필요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달된다.

투자자에게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가 기사 상단에 빨간 화살표와 원재료 숫자가 함께 제시된다. 공감형 독자에게는 같은 이야기를 인간적인 사례나 서사적 인물 중심으로 풀어낸다. 전문가에게는 군더더기 없이 새로운 핵심 사실만 전달한다. AI 에이전트는 하나의 원천 기사를 실시간으로 재조합해 각기 다른 경험을 만들어낼 것이다. 사실이 점점 더 싸지고 쉽게 복제될수록, 인간이 공

들여 만든 서사는 가장 강력한 프리미엄이 된다. ‘무엇을’ 전달하느냐보다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가진 가장 강력한 해자(Moat, 방어시설)가 된다.

AI가 저널리즘의 새 소비자로 부상

데니얼 트리엘리

메릴랜드 대학교 메릴 저널리즘 대학 조교수

2026년 저널리즘은 더 이상 사람만을 독자로 하지 않을 것이다. 챗봇, AI 에이전트, 정보 요약 시스템이 뉴스를 검색하고, 공유하고, 재배포하는 주요 소비자가 된다. 이에 따라 저널리즘은 검색 최적화된 기사가 아니라, 기계가 이해·조합·활용할 수 있는 구조화된 정보로 재편된다. 뉴스에 큰 관심이 없던 대중 역시 개인화된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 소비를 통해 저널리즘의 효용을 다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뉴스 조직에 새로운 수익화와 브랜드 가치 제고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편집 통제권 상실과 저널리즘의 데이터화라는 위험도 동반한다. 저널리즘은 독립적인 공공 서비스가 아니라 알고리즘 산업의 부속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질 것이다.

뉴스 크리에이터와 협력 중요

제레미 길버트

노스웨스턴 대학교 메릴 스쿨 교수

편집장이 기자에게 기사를 할당하고 통제하는 전통적 뉴스룸 모델은 힘을 잃고 있다. 대신 2026년 성공적인 언론사는 독자와 직접 연결되는 신뢰받는 기자와 크리에이터를 확보하고 지원하는 곳이 될 것이다. 뉴스 브랜드는 전면에 나서기보다 한발 물러나, △훌륭한 취재를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 △강력한 스토리텔링 구현 기반 △독자에게 도달하고 봉사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제공하는 역할로 재정의된다. 이제 언론사는 뉴스 크리에이터와 경쟁하는 대신, 그들이 선택하고 싶어 하는 ‘가치 있는 파트너’가 되기 위한 경쟁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즐거운 뉴스’로 뉴스 회피 극복

스테파니 에저리

노스웨스턴 대학교 메릴 스쿨 교수

여러 연구가 보여주듯, 뉴스 피로감은 종종 뉴스를 회피하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2026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해법은 두 가지다. 첫째, 엔터테인먼트를 뉴스의 경쟁자가 아니라 기분 관리와 감정 회복을 돋는 핵심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오락과 즐

거움을 제공하는 경험은 다시 뉴스에 참여하도록 돋는다. 둘째, 뉴스 자체를 더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무거운 이슈 속에서도 영감을 주고 고무적인 이야기를 함께 전달함으로써 뉴스가 항상 암울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궁극적으로 독자와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돋는다.

진정성 있는 ‘사람 이야기’가 경쟁력

빌 아데어

듀크대학교 교수·폴리티택트 창립자

거짓 정보가 정치 담론을 잠식하고, AI가 가짜 콘텐츠로 피드를 채우는 시대에 사람들은 점점 더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야기 형식과 뉴스 전달 방식이 지나치게 판에 박히고 인위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기자들은 감정 없는 3인칭 시점으로 기사를 쓰지만, 이러한 중립적인 입장은 관행이 기사에서 인간미를 빼앗아 갈 수 있다.

교사의 일주일 같은 이야기면 충분하다. 며칠간의 밀착 취재만으로도 독자가 갈망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한 이야기가 가장 강력한 이야기가 되는 시대다.

미디어 브랜드의 재부상

존 사로프

차트비트 CEO

소셜 미디어와 검색 플랫폼이 더 이상 안정적인 유통 파트너가 아닌 현실에서, 언론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은 브랜드에 대한 독자의 인식과 충성도이다. 생성형 인터페이스가 검색을 대체하면서,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졌다. 강력한 브랜드는 직접 독자를 유입하고, 프리미엄 광고를 확보하며, 기술 플랫폼과의 협상에서 힘을 발휘한다. 트래픽보다 참여도가 핵심 성과 지표가 될 것이다. 플랫폼은 콘텐츠를 배포할 수 있지만, 신뢰를 대체할 수는 없다. 참여는 신뢰의 가장 분명한 신호이다. 수동적 배포의 시대는 끝났고, 가장 혁신적인 언론사는 자체 브랜드를 독자가 신뢰하는 것, 광고주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리고 알고리즘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긴다.

회원사 동정

경남일보, “경남일보 역사자료를 찾습니다”

경남일보(발행인 고영진)는 지역 언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 역사를 함께 기록하고자 옛 경남일보와 관련된 역사자료를 수집한다. 수집 자료는 경남일보의 과거를 담은 사진 및 기사 스크랩, 간행물, 광고 자료, 각종 문서 및 물품 등 경남일보와 관련된 각종 자료이다. 기록물 원본 기증 또는 복사·스캔본 제공 모두 가능하며, 자료 디지털화 후 원본 반환 요청도 가능하다. 기증 시, 자료의 출처와 제공자 이름은 기록에 명기된다. 문의는 055-751-1003.

국제신문, ‘국제아카데미 제23기’ 원우 모집

국제신문(발행인 황문성)은 최고 강사진을 초빙해 명품 강연을 선보일 국제아카데미 제23기 원우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CEO, 공공기관·기업 임직원, 전문직 종사자, 오피니언리더 등이며 교육 기간은 2026년 3월~12월(7, 8월 하계방학)이다. 강의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8시 30분(강연 전 석식 제공)이다. 수강료는 550만 원이며 문의는 051-500-5166.

매일경제, ‘청소년 창의발명대회’ 참가자 모집

매일경제(발행인 장승준)는 오는 15일까지 ‘제5회 원더차일드 창의 발명 경진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대회는 인공지능(AI·챗GPT), 사물인터넷(IoT), 보안(딥

페이크), 로봇, 모빌리티, 바이오 등 6개 분야에서 창의적 발명과 아이디어를 겨루는 대회이다. 시상은 분야별 금·은·동상, 과학혁신상 등이며 초·중·고 학생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본선은 오는 30~31일 진행하며 문의는 02-2000-5469.

부산일보, ‘제19기 CEO아카데미’ 원우 모집

부산일보(발행인 손영신)는 최고경영자와 지역사회의 오피니언리더를 대상으로 제19기 부산일보 CEO 아카데미 원우를 모집한다. 지원자격은 CEO, 전문직 종사자, 공공기관, 단체장 등이며, 교육 기간은 2026년 3~12월(7, 8월 하계방학)이다. 강의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8시 30분(강의 전 석식 제공)이다. 수강료는 500만 원이다. 문의는 전라포럼 아카데미 사업단(063-287-2700).

이데일리, ‘2026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대상’ 공모

이데일리(발행인 이익원)는 오는 7일까지 ‘2026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대상’ 후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고객 중심 경영을 토대로 모범적 성과를 거둔 금융기업을 격려하고,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견전한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부문은 △금융위원장상 △금융감독원장상 △서민금융 진흥원장상 △금융협회장상(5개) △이데일리 회장상(특별상) 등이다. 문의는 금융대상 사무국(02-3772-0376).

조선일보, ‘2025 청소년학교, 찾아가는 인문 콘서트’

조선일보(발행인 홍준호)는 지난 12월 29일 ‘2025 청소년학교, 찾아가는 인문 콘서트’ 온라인 강

전라일보, 전라포럼 제3기 원우모집

전라일보(발행인 유현식)는 창의적인 사고의 리더 양성을 위해 ‘전라포럼’ 제3기 원우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기업 CEO 및 임원, 국회의원, 정부 및 전북 기관 단체장, 전·현직 교수 등이며, 교육기간은 2026년 3월~2027년 2월(계·동계 휴강)이다. 강의시간은 매주 목요일이며, 수강료는 500만 원이다. 문의는 전라포럼 아카데미 사업단(063-287-2700).

전자신문, ‘AI 네이티브 개발 플랫폼’ 컨퍼런스 개최

전자신문(발행인 강병준)은 오는 22일 잠실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AI 네이티브 개발 플랫폼’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개인 개발자에서 AI 매니징 엔지니어로의 전환 △비개발부서 전직원 바이브 코더(생성형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코드를 작성하는 행위) 만들기 △AI 코딩 도입 7가지 조직 원칙 등을 다룬다. 참가 대상은 개발자, CTO/팀장, 비개발 실무자, 공공·기업 AI 담당자 등으로 선착순 100명 모집한다. 참가비는 사전등록 220,000원, 현장등록 242,000원이며 문의는 (02-6925-6317).

한국경제, 모바일 앱 전면 업그레이드

한국경제(발행인 김정호)는 지난 12월 17일 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모바일 앱에 ‘네이티브 사용자경험(UX)’을 적용했으며, 콘텐츠 구조를 뉴스, 인공지능(AI), 게임 등으로 분류해 사용

신년 발행인 세미나

1월 15~16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신문협회는 오는 15~16일(목~금)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신년 발행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조성준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겸 빅데이터 AI센터 센터장이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문산업의 미래(가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일간신문 및 뉴스통신 기사 102건, 광고 64건 주의 결정

신문윤리위 12월 심의 결과

12월 기사 및 광고 심의 현황

신문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12월 9일 제1,003차 회의를 열고 신문협회 회원사의 기사 102건과 광고 64건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등 위반으로 각각 ‘주의’ 결정을 내렸다(표). 심의결정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윤리위 홈페이지(www.ikp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분	건수		
	기사	주의	경고
일간신문 및 통신	102	0	0
	64	0	0
	243	0	0
온라인 신문	1	0	0
	64	0	1
	1	0	0

좌를 개최했다. 강좌는 사진기자로 활동한 ‘채승우의 사진이야기’와 이규웅 파워블로거의 ‘토마스 모어, 서재 속 영화관’이다. 앞으로 여섯 편씩 총 열두 편이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조선일보 유튜브(www.youtube.com/@chosunmedia) 참조.

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안드로이드·iOS 운영체제를 반영해 터치, 화면 전환 등 주요 동작을 디바이스 특성에 맞춰 구현했다. 이에 따라 앱 화면 데이터 로딩 시간도 이전보다 20% 단축됐다.

신문협회보

발행인	임채청
편집인	정우현
제작	한국신문협회
발행처	서울 종로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302호
인쇄	삼아인쇄
창간일	1985년 4월 15일
등록번호	서울, 다50673
대표메일	webmaster@presskorea.or.kr

2026년 한국신문상을 공모합니다

한국신문협회는 뛰어난 취재·보도 활동을 통해 한국 신문의 발전과 언론창달에 기여한 언론인을 표창하기 위해 한국신문상 수상작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 공모부문

- 뉴스취재보도 부문
- 기획·탐사보도 부문

■ 공모대상

- 한국신문협회 회원사에 재직 중인 언론인으로 소속사 발행인의 추천을 받아야 함
- 신청 건수에 제한 없으며 시상부문별 중복 추천 가능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공적(신문 보도)

■ 구비서류

- 추천서 1부(소정양식), 공적자료 1부

※ 추천서는 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후 공적자료와 함께 웹하드 ‘한국신문상 공적자료’ 폴더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 시상

- 공모부문별 상패와 상금 500만원(각 부문별 최대 2건 시상)

■ 접수마감

- 2026년 1월 30일(금) 17:00까지

■ 시상일자

- 제70회 신문의 날 기념행사(2026년 4월 7일)

■ 문의처

-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상 담당자 (02-722-4361)
- 웹하드(www.webhard.co.kr) ‘한국신문상 공적자료’ 폴더 (아이디 : presskorea / 비밀번호:2251)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